

민주 초선 의원들, 지도부에 쇄신위 구성 요구

성추행 사건 사과·당정청 관계 등 의원 집단토론회 민주주의 강화도 조국 사태·부동산 문제는 빠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2일 당 쇄신위원회 구성 등 자체 쇄신 방안을 당 지도부에 제시했다.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성명에서 "당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쇄신안 마련을 위한 당 쇄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당정청 관계에서 민심이 반영되도록 당이 주도성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원 간 집단토론회 활성화 등 당내 민주주의 강화도 요구했다.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의도와 전국 각 지역위원회에 '손소리 경청 텐트'를 설치하고 세대별 심층토론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

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저희가 부족했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다.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 모임과 9개 분과별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현충원 방명록에서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적은 데 대해 "그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단지 국민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별도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쇄신안에 '조국 사태'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데 대해선 "조국 문제는 2030 의원들이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정책 쇄신안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2~3개월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보유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본다"며 "무주택자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는 국민 여망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논의해야지, 기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당헌을 재검토해 귀책 사유 발생 시 보궐선거에서 무(無)공천 할지에 대해서도 향후 쇄

신위 논의 과제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더민초는 원내대표단에 민병덕, 이수진(비례) 의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원 원내대표가 남

녀 의원 각 1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민주 당대표 선거 '탈당 경력자 25% 감점' 이슈로

홍영표 "송후보가 조항 삭제 요청" 송영길 "전형적인 허위사실" 반박

민주당 당권 구도가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탈당 경력자의 선출직 경선 참여시 25% 감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정치인들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탈당 경력자의 감점 조항 개정 문제는 폭발성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이슈에 불을 붙인 진영은 홍영표 후보 측이다. 홍 후보는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탈당 경력자의 지방선거 경선 참여시, 전체 점수의 25%를 감산하는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변재일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지난 21일 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변재일 전준위원장이 송 후보 측의 요청이라며 탈당 경력자의 경선 점수 감산 제도를 바꾸자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열린 대전지역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송 후보 측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반박하고 있다. 송 후보는 광주와 대전 토론회에서 "탈당 경력자의 경선 점수 감산 개정 주장을 하지도 않았으며 처음 듣는 얘기"라며 "변 위원장에게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 측은 "홍 후보 측에서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송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변재일 위원장에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며

"이를 뒤로하고 홍 후보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내놓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주에는 22일 "당권 후보 토론회에서 제기된 탈당자 복당에 대한 변재일 전준위원장의 발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각 후보 진영에 보냈다. 이에 따라 탈당자 페널티 부과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후보 간의 감정적 앙금은 더 쌓이면서 남은 선거 운동 기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탈당 경력자의 선출직 경선 참여시 페널티를 주는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오히려 감산 원칙이 공고하게 됐다"며 "당권 구도가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 막판 선거 운동이 가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차기 대통령감은? 이재명 25%, 윤석열 22%, 없다 23%"

"정권교체 37% vs 재창출 31%"

이재명 경기지사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두고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엘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묻은 결과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는 25%, 윤 전 총장을 택한 응답자는 22%로 집계됐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전주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씩 동반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와 같은 8%를 기록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각각 3%,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의 지지율을 보였다. '대통령감이 없다'는 응답은 23%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 48%, 이 전 대표 19% 순이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전 총장은 54%의 지지를 받았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선 37%가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31%가 '여당의 정권 유지'를 꼽았다. '제3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23%로 뒤를 이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여진

'도로 새누리당' 프레임 경계감 초선 "일부 주장...소모적 논쟁"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4·7 재보선 승리에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차단막을 치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군사독재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결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오만한 것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면론 자체를 부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

다. 자칫 '도로 새누리당'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날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사면론을 꺼낸 데 대한 아쉬움도 깔린 분위기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선거 끝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나 사면론을 꺼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제 좀 먹고살 만하냐'는 인상을 주기 좋다"며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오는 사면론은 정말 무의미하다"며 "우리가 사면할 수 있는 지위에 가도록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형배, '홍익인간→민주시민' 개정안 철회... "논란 송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일 법률로 규정된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 용어를 삭제하는 자신의 법안에 대해 비판이 일자 발의를 철회하고 사과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홍익인간, 인격도야(인격을 닦고 가다듬음),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이념이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됐다"며 이를 삭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대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

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대종교 측에서 "단군사상의 핵심인 홍익인간이다. 배달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3.4%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면서 "사려깊지 못해 염려를 끼쳤다.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는 안 되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월세660만원 고정 수입

-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 6층중 4층 전체, 240평
- ▶ 메리츠증권회사 임대 중
- ▶ 3면이 바다 전경, 뷰 좋음
- ▶ 용자 6억8000만원 있음
- ▶ 회사 사정상 급매, 15억 → 13억

중개환영. 010-3605-500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59만원~

130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